

# 국감장서 만난 명태균·오세훈... “7번 만났다”-‘진술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시장 보궐 선거 당시 의혹을 제기해 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오시장을 비난했다. 오시장은 다음 달 대질신문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명씨는 23일 오후 서울시장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 집의에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오세훈 시장과 11월 8일 10시에 특검에서 대질을 한다”며 “대질 신문은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대질 신문 때 다 맞춰서 온다”고 말했다.

발언을 자제하겠다고면서도 명씨는 오시장을 저격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는데 오시장이 저를 고발했다.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흥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다”며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쫓겨나고 고발을 한다”고 말했다.

또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데 오세훈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온다”며 “오세훈 시장이 저를 2번 만났다. 나뻐왔다 다 거짓말이다. 7번 만났다”고 밝혔다.

명씨 발언에 대해 오시장은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시장은 또 “5월에 검찰에 대질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안 됐고 이번에 특검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제가 대질에서 밝히고 싶은 것들이 많다. 여기에서 밀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오시장이 거듭 진술을 거부하는 가운데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23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답변 자제하겠다고던 명태균 오세훈 공개 비판 오세훈 “대질에서 밝히고 싶은 것들이 많다”

명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의에 “여의도에 갔을 때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을 소개시켜주려 하기에 제 얼굴이 배신 배반형이어서 안 만나겠다고 도망을 갔다”며 “제가 반기문 총장님을 보았는데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날 것을 두려웠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다가 광진구 구의동 쪽에서 12월 9일에 오세훈을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또 “처음으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와서 2호선 타고 온다. 거짓말할 게 뭐가 있나. 문자, 카톡 다

나와 있는데”라며 “당첨 사무실에서 만났고 김종인도 만났습니다. 27일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31일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조은희도 만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단말화 안 하나고 하니까 오세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하시더라”고 덧붙였다. 명씨는 또 “(오세훈 시장 측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다”며 “자기는 자꾸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뉴스1

## 이태원유가족 “합동감사 결과, 만시지탄이지만 의미있어” “참사 원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 분석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가 23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진상규명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조와 수습,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빠진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당시 경비 인력 부족을 초래해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참사 대응 등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유가협은 논평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감사를 실시해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과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지난 3년 간 정부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감사 이전 기관들은 자체 감사로 숨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책임이 확인된 주요 공직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미 퇴직해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유가족들은 이번 감사가 참사 원인에 한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재난 대응과 사후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촉구했다.

유가협은 “피해자 구조와 수습, 대응 전반의 과정에 대한 감사는 이번 합동감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가 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소방 구조구급 활동에서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인과 집중이 예상됐던 헬리콥터이마저도 대통령실에만 경비인력이 집중된 배경에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뉴스1

## 이재명 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질서 어지럽혀 엄정 단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正大해야 할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

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라며 “특정한 사적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도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검찰의 ‘쿠팡 바주기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감사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스1

## 광주시 ‘8.6조’ 2차 추경 의결... 원안통과는 9대 의회 최초

광주시의회가 5670억원 증액을 골자로 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원안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기정예산 8조891억원 대비 7.0% 늘어난 8조6561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 의결한 것은 2022년 9대 의회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2차 추경은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556억 원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15억30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억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9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1억8000만원 등이

### 기정예산 8조891억 대비 7.0% 늘어난 액수

### AI창의문화복합공간 국비사업비 10억 부활

포함됐다. 또 미래산업인 모빌리티 AX(인공지능 전환)실증랩 구축 예산 10억원과 AI(인공지능)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전기획연구 1억5000만원,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 혁신클러스터 기획 4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자연재난 응급복구 10억원, 호우 피해 재난대책 204억원, 집중 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2억1000만원, 전통시장 전기·가스설비 복구 지원 700만원도 집행부 요구

대로 반영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 217억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예산 9억8000만원도 예정위 문턱을 넘었다. 국비 예산임에도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이 됐던 AI창의문화복합공간 추진 사업비 10억원은 예정위 심의에서 전액 부활됐다. 해당 국비는 안도길(광주 동남읍) 의원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임에도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집행부의 설명 부족 등으로 이례적으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예결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 행정으로 AI 관련 국비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AI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와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임위 심사를 받으려고 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극장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광주시 부담액 200억원은 지방재정법 개정 여부에 따라 추후 편성하기로 한 집행부 의견을 수용했다. /뉴스1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당신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